

공수처는 헌법파괴

헌법 제12조, 89조, 96조 무력화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 공수처는 대통령 코드 인사에 의해 정치 경찰, 좌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 경찰 전체를 종처럼 부리고 타 부서에서 무제한 파견을 받는 공룡 조직이다
- 고위직, 판검사, 현역/예비역 장성 등에 대한 자의적 타겟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는
 공포스러운 슈퍼 비밀경찰, 슈퍼 비밀검찰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치 국가, 공산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핵심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파괴하는 슈퍼 비밀경찰, 비밀검찰입니다.
공수처법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입니다.

- 공수처는 대통령 코드 인사에 의해 정치 경찰, 민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 행정과 사법의 분리·견제·균형을 파괴하고 ‘완장 부대’로 이루어진 특수 비밀경찰, 비밀검찰 구성

- 경찰 전체를 종처럼 부리고 타 부서에서 무제한 파견을 받는 공룡 조직이다.

▶ 예산과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공룡 괴물 탄생

- 고위직, 판검사, 현역/예비역 장성 등에 대한 자의적 타겟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는 공포스러운 슈퍼 비밀경찰, 슈퍼 비밀검찰이다

▶ 나치의 게슈타포, 소련의 KGB와 같은 전체주의 독재 기구

Q1

공수처는 왜 헌법 파괴인가?

- 헌법 12조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 검사 조직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직에 대한 단속’을 명분 삼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 경찰, 정치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특수 비밀 경찰-검찰(공수처)을 구성하도록 만들었으므로써, 13세기 영국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이후 확립돼 온 ‘개인 존엄성’의 법률 원칙을 근본부터 파괴한다.
- 헌법 89조는, 검사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와 기소의 총체적 책임자로 규정하여 그 임명과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총장에 대해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특수 비밀 경찰-검찰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수사 및 기소에 관한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다.
- 헌법 96조는 오직 정부조직법에 의해서만 정부의 부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정부조직 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한다.

- 모든 정부조직은 예산과 인원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조직 전체를 종처럼 부릴 수 있으며 타 부처로부터 무제한 파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인원에 의한 통제를 벗어난 거대 공룡 조직이다. 이는 헌법에 내포돼 있는 정부조직 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한다.
- 수사 집행은 경찰이, 수사 지휘는 검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최소한의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질 뿐 아니라, 특정 집단(소위 ‘고위직’)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다. 이는 헌법에 내포돼 있는 개인존엄성, 자유,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헌법 파괴다.



핵심요약

- ① 특정 집단에 대한 특수 경찰-검찰 설치
- ② 수사 지휘와 기소에 관한 검찰총장의 총체적 권한과 책임 백지화
- ③ 정부조직법 개정 없는 부처 신설
- ④ 예산과 인원에 관한 제어를 벗어난 공룡조직
- ⑤ 수사권과 지휘권을 뭉뚱그려 독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짓밟는, 전제주의(totalitarianism, 히틀러·스탈린·모택동·김일성·폴포트 체제) 폭거

저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들의 궁극적 노림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깨뜨려서 대한민국을 친중·친북·반미·반일 코리아연방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들은 집권 이후 다음과 같은 도발을 저질렀다.

- ① 중앙정부를 무력화해서 ‘지방분권’ 체제로 바꾸려는 헌법 개정 시도
- ② 원자력 발전을 없애는 대신 북한 관통 러시아 천연가스를 핵심
에너지로 삼음으로써 한국인 전체를 북한의 에너지 인질로 삼으려는
시도
- ③ DMZ와 한강 하구의 방어 시스템을 해체해서 수도권 2,500만 명을
‘안보 인질’로 전락시키려는 시도
- ④ UN 제재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김일성 사교
(邪敎)에게 현금 긴급 수혈을 하려는 시도
- ⑤ 국제법을 깡그리 무시한 징용판결(2018년 10월, 대법원)을
도화선으로 삼아, 반일 히스테리를 부추겨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한미일 공조체제를 깨뜨리려는 시도
- 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여 (예전에는
5년) 매년 미국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든 다음 (2018년에
협상 주기 변경), 분담금에 관한 공정한 산정기준 제시 없이 무조건
'돈 뜯기'로 매도하여 반미 투쟁을 선동하려는 시도

공수처는 이 같은 ‘대한민국 해체를 겨냥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음모’의 한 부분이다. 공수처는 정치인, 판검사, 공무원, 현역/예비역 장성 등을 숙청·억압하고 길들여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totalitarianism, 히틀러·스탈린·모택동·김일성·폴포트 체제)로 전락시키는 ‘사냥개’(비밀경찰·비밀검찰)에 다름 아니다.

특히 공수처는, 뇌물·비리뿐 아니라 자기들 입맛대로 광범위하게 엮어 넣을 수 있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을 다루기 때문에 공직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또한 공수처 내부에서도 상급자에 대해 하급자가 무제한 숙청을 자행할 수 있도록 소위 ‘이의권(하급상을 저지를 수 있는 권리)’을 두었기 때문에 새파란 좌파 변호사들의 완장질 천국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현직 경찰을 공수처로 발령냈다가 다시 원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 전체를 ‘권력에 봉사하는 사냥개’로 길들일 수 있게 됐다.

Q3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패트(패스트트랙)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다루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패트를 이용해서 공수처법을 막무가내 처리하려 칼을 빼 들었다. 국회의장(문희상)은 이 같은 ‘국회를 이용한 쿠데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히틀러의 나치(Nazi) 역시 유혈 혁명이 아니라 ‘국회 쿠데타’를 통해 소위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었다.)

공수처법을 패트로 처리하려는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국회 안의 심의위(이른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오신환을 속아내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해촉서’를 국회의장에게 보내어 해촉(해임) 처리를 시켰다. 이 역시 불법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임서를 쓰지 않는 한 위원회에서 쫓아낼 수 없다.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폭거에 대해 현재에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현재는 깜깜 모르쇠 시치미 떼고 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법은 빙산의 일부분이다.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친중·친북·반미·반일 코리아 연방으로 변질시키려는 음모가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음모를 위한 무지막지한 불법 행위, 헌법파괴 행위가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야당이 이에 대해 결사 항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조선·중앙·동아와 같은 빅미디어조차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아파트 단지 앞, 지하철 앞, 근린상가 앞 서명운동과 같은 지역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식별해야 한다.

둘째,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종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비판·평가·견인하는 지역별 ‘독립적 유권자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시민본부는 이 같은 독립적 유권자 조직을 지향한다)

셋째, 지역 캠페인과 지역 조직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요약

국회는 망가져 있고 언론은 마비돼 있다. 지역마다 독립적 유권자 조직이 만들어져 국회의원을 비판·평가·견인해야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서명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조직을 기반으로 더 활발하게 지역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지역 캠페인과 지역 조직이 서로 서로를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산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나서기 싫어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조직을 꾸려서 활동할 수 있을까? 그 같은 사람들이 한 선거구에 50명, 100명씩 성장해 나올 수 있을까? 꿈 같이 막막한 일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두 개의 커다란 세계사적 변화가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문명 전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한편으로는 중국이 군사 도발을 못하도록 겹겹이 중국을 군사 봉쇄(military containment)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 경제-거리두기(economic decoupling)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자유화된다. 홍콩의 자유혁명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듯이, 중국의 자유화는 우리 정신과 영혼을 바닥에서부터 자극한다.

둘째, 중국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분단 구조의 붕괴, 즉 북한 해방을 가져온다. 북한 해방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가짜 딜레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북한 해방은 우리로 하여금 친북/종북 세력의 본질을 퀘뚫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우리 자유시민은 이와 같은 두 개의 거대한 변화가 일으키는 물결을 타고 나아가면 된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행태가 크게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선거구별로 조직된 자유시민의 네트워크가 세상을 바꾸게 된다.

독립유권자 조직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유시민본부는 선거구별 유권자조직을 지향합니다.

어느 정당, 어느 의원, 어느 후보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지향합니다.

선거철에 회원들 사이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에도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교모(조국 법무장관을 사퇴시키고 공수처 법을 이슈화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전국 7,000여 교수 모임) 혹은 복음주의 기독교 네트워크 혹은 동성애 반대 시민운동조직 등과 함께 논의해서 투명하게 결정합니다.

“우리 지역 후보/국회의원을
우리 자유시민들이 비판·평가·견인해야 한다”

이 비전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자유시민본부에 참여해주십시오.

홈페이지 : www.ubon.kr

문자 : 010-4597-2224

이메일 : 33coko@gmail.com

이 팜플렛은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www.forjustice.kr)가 만든 ‘공수처 설립에 관한 10가지 질문’ 소책자의 내용을 참조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교모 교수들께 감사드립니다.